



# 유럽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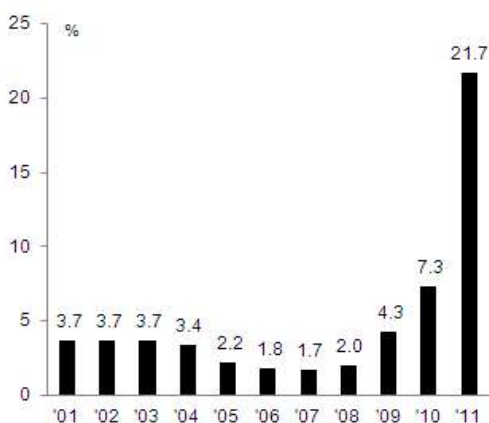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Bloomberg는 유럽 각국이 유로존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시장 개선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.
  - Bloomberg는 1월 31일자 사설에서 스페인을 예로 들면서 유럽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함.
-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부문 중심의 양호한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했으나, 2008년 금융부문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됨.
  -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공공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기인한 반면,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유로존 가입이 시발점이 되어 ‘유동성 과다 → 경기호황 → 거품붕괴’로부터 발생함.
    -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균형재정을 유지했으며 공공부문 재정에서는 현재에도 독일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음.
    - 유로존 가입 이후 적용된 단일 금리가 스페인 경제상황에 비해 너무 낮아 대출 급증, 자산가격 상승, 주택 및 건설경기 붐을 초래하였으며,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버블이 붕괴됨.
    - 고용창출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건설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였고, 부실대출에 크게 노출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짐.<sup>1)</sup>
  -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악화로 전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함.
    -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재정지출 관리에 실패함.
- Bloomberg는 스페인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조였다면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충격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금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.

1) 저축은행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현재 55.7%로 일반은행보다도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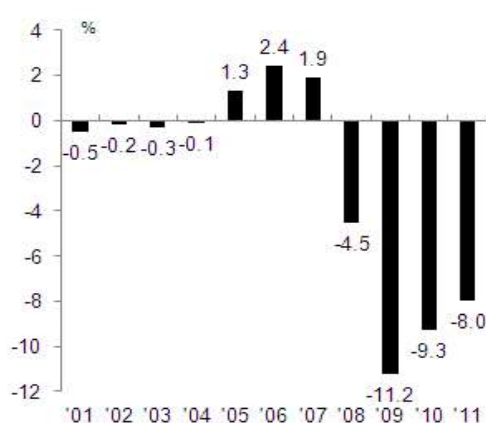
- 정규직 노조원을 위주로 하는 스페인의 노사협상 관행으로 인해 경기침체 중에도 정규직의 해고는 고사하고 이들의 임금, 부가혜택(fringe benefit), 근로조건 모두가 조정되지 못함.
  - 독일은 일자리 공유(job sharing)와 임금 조정을 통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나, 스페인은 정규직 임금조정 경직으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가져옴.<sup>2)</sup>
  - 2005년 12%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률은 2011년 12월 현재 절반 수준인 6%대로 크게 하락한 반면, 2005년 8.5%를 밑돌았던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1년 12월 현재 22.9%까지 높아졌고 청년실업률은 48.7%까지 상승함.
-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스페인의 대외경쟁력을 하락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대외적 평가를 악화시킴.
  - 정규직 위주의 비(非)해고, 하방경직성 임금 협약 관행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하락시킴.
  - 결국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금리가 높게 나타남.

〈그림 1〉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



자료: Eurostat,

〈그림 2〉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



자료: Eurostat,

■ 또한, Bloomberg는 스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,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함.

(Bloomberg, 1/31, Eurostat)

2) 기업들이 해고하기 쉬운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/3을 차지하게 됨.